

KERI Brief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inylee@keri.org)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한국 여성의 경황율은 50%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1986~2012)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 경황율의 추이를 출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여성의 경황율은 정체나 감소 추이를 보였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들 사이에서 경황율 정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이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이는 육아정책 대상이 30대 후반 연령대로 이동 중임을 시사한다. 그간의 여성고용정책은 여성복지정책

과 많은 부분 중첩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에 편중되어 왔고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여성 경황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육아정책이 복지정책에서 취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책 확충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 경황율 제고가 여성 고용률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문제제기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 제고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책 메뉴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매 정부마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

○ 과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인력활용을 강조

○ 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방안으로 설정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한국 여성의 경활율은 50%에 정체되어 있음

- 2012년 한국 여성의 경활율은 50%로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미국 58%, 영국 57%, 일본 48%¹⁾

- 2012년 한국의 경활율 성별격차는 23%p로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미국 12%p, 영국 12%p, 일본 22%p

-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사실은 한국 여성의 경활율이 1997년 이후 정체 추세에 있다는 점임

○ 여성 경활율의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미국, 스웨덴, 일본이 있음

□ 여성 경활율 정체 현상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그간 정부는 육아·보육지원방안에 치중하였으나 효과는 불명확

○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출산·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임

○ 육아와 관련 없는 여성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정책은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못함

□ 본고는 모든 여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한국 여성의 경활율 현황을 짚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경제활동인구조사(1986~2012)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의 경활율 추이를 출생연도별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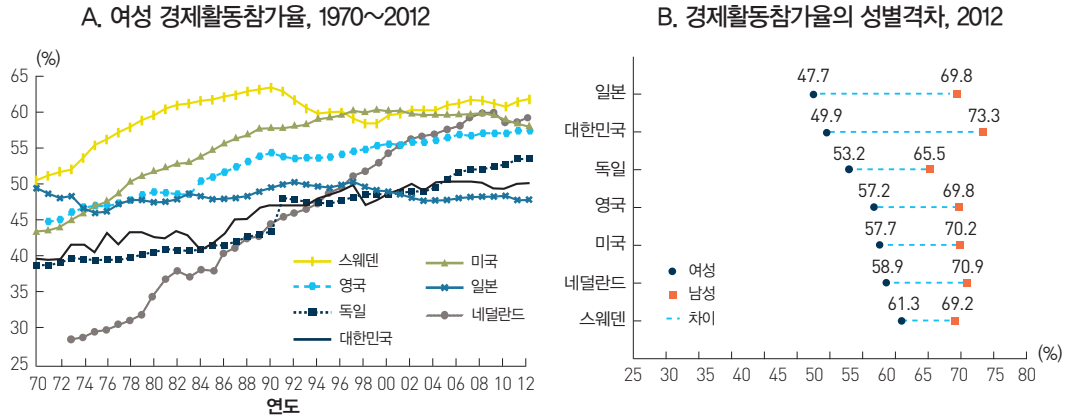
○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경활율을 출생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시대'별 추이가 아닌 '세대'별 추이를 분석

- 출생연도별 평균 추이와 더불어 학력별, 혼인상태별 경활율과 육아·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에 제약을 받는 여성의 비중이 출생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

- 현황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1) 이 수치는 16세 이상 여성을 기준으로 함. 15~64세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경활율은 각각 55%, 67%, 71%, 63%임.

[그림 1] 국가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자료: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 1970~2012

자료: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 1970~2012

2. 한국 여성의 출생연도별 경황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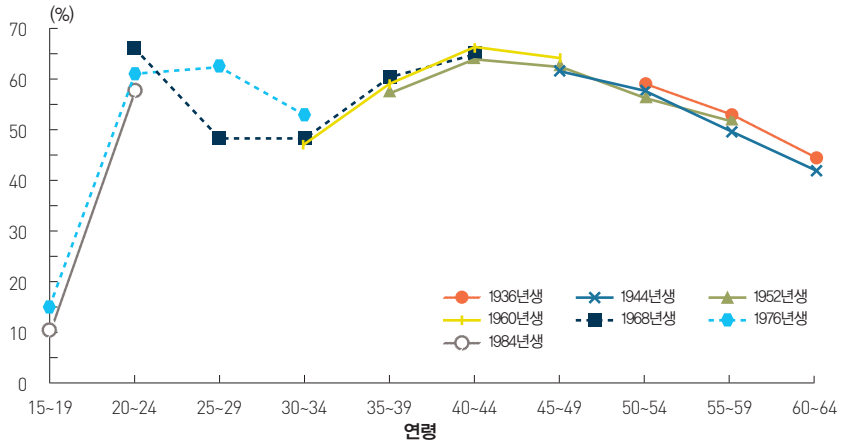
(1) 전체 여성의 경황을

□ 25세 이상 여성 경황율의 경우, 30대 후반을 기준으로 저연령층 여성의 경황율은 증가, 고연령층 여성의 경황율은 정체

-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은 증가 추이
 - 1968년생, 1976년생 여성의 20대 후반 경황율은 각각 48%, 63%. 68년생 여성에 비해 76년생 여성의 경황율이 15%p 더 높음
 - 1968년생, 1976년생 여성의 30대 초반 경황율은 각각 48%, 53%. 5%p 증가
 - 이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

- 반면, 30대 후반-6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은 정체
 - 1952년생, 1960년생, 1968년생 여성의 30대 후반 경황율은 각각 58%, 59%, 60%. 52년에 태어난 여성과 16년 뒤에 태어난 여성의 경황율 차이가 거의 없음
 - 1952년생, 1960년생, 1968년생 여성이 40대 초반, 즉 경황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에도 각각 65%, 66%, 65%의 경황율을 기록, 정체현상이 뚜렷
 - 5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은 30대 후반 여성의 경황율과 비슷한 수준인 57%에서 정체. 1936년생 59%, 1944년생 57%, 1952년생 57%
 - 6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도 정체. 1936년생 42%, 1944년생 44%

[그림 2] 한국 여성의 출생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2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은 감소 추이

- 1968년생, 1976년생 여성의 20대 초반 경활율은 각각 66%, 61%. 68년생 여성에 비해 76년생 여성의 경활율이 5%p 낮음
- 다수의 연구에서 2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 감소와 이들의 대학진학율 증가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²⁾

2) 학력수준 상승과 경활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예로 권정현(2010), 배기준(2013) 참조.
 3) 2년제 대학에 진학, 졸업했거나 혹은 4년제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졸업하지 못한 여성을 의미함.

(2) 학력별 여성 경활율

□ 1944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의 연령별 경활율은 학력과 비례하지 않음

- 대체로 고졸 이하 여성 > 대졸 이상 여성 > 초대졸 이하³⁾ 여성 순으로 높음
- 예를 들어 1944년생 여성의 50대 초반 경활율은 고졸 이하 57%, 초대졸 이하 37%, 대졸 이상 40%

□ 1976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의 연령별 경활율은 학력과 비례

- 대졸 이상 여성 > 초대졸 이하 여성 > 고졸 이하 여성 순으로 높음
- 예를 들어 1976년생 여성의 30대 초반 경활율은 고졸 이하 48%, 초대졸 이하 53%, 대졸 이상 58%

□ 30대 이상 여성 경활율의 경우, 저학력 여성의 경활율은 정체, 고학력 여성의 경활율은 대체로 증가

- 고졸 이하 여성인 경우, 전체 여성 경활율 패턴과 마찬가지로 경활율 정체

○ 예를 들어 1936년생, 1944년생, 1952년생 여성의 50대 초반 경활율은 각각 46%, 49%, 48%

○ 1960년생, 1968년생, 1976년생 여성의 30대 초반 경활율은 각각 59%, 57%, 57%

- 초대졸 이하·대졸 이상 여성 가운데 50대 미만 여성의 경활율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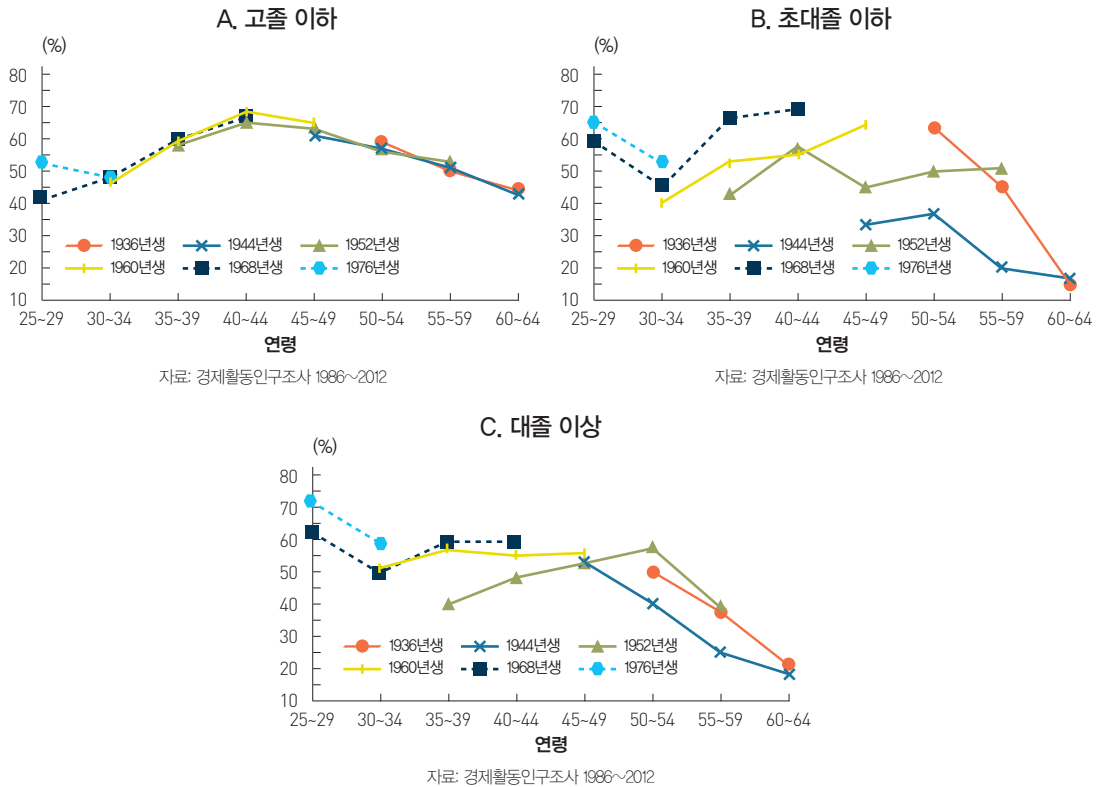
○ 전체 여성 경활율 추이에서 나타난 1968년생과 1976년생 사이 경활율 증가가 고학력 여성들의 경활율 증가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초대졸 이하·대졸 이상 여성 가운데 50대 이상 여성의 경활율은 감소

□ 20대 후반 여성 경활율의 경우, 모든 학력 집단에서 1968년생과 1976년생 사이 경활율이 증가

- 1968년생과 1976년생 여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여성은 42%에서 53%, 초대졸 이하 여성은 59%에서 66%, 대졸 이상 여성은 62%에서 73%로 모든 학력 집단에서 증가

[그림 3] 한국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 혼인상태별 여성 경활율

□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 경활율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여성의 경활율이 기혼여성4)의 경활율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예를 들어 1968년생 여성의 30대 후반 경활율은 미혼여성의 경우 82%, 기혼여성의 경우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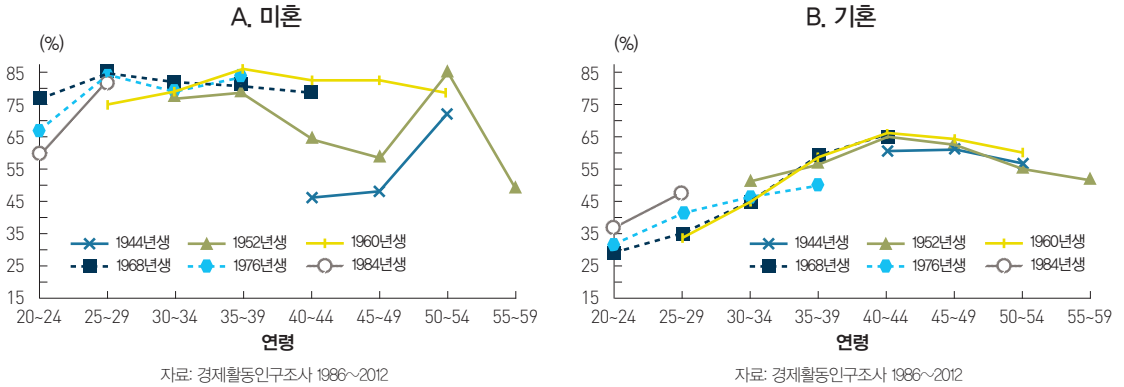
□ 30대 후반 이상 여성 경활율의 경우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은 경활율 증가, 이후에 태어난 여성은 경활율 감소

□ 20대 후반 기혼 여성 경활율은 증가

- 1968년생, 1976년생, 1984년생 기혼여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은 각각 34%, 41%, 47%

4) 결혼한 적이 있는 모든 여성(유배우자, 배우자 사별, 이혼 여성)을 뜻함.

[그림 4] 한국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 육아 및 가사와 여성 경제활동참가

□ 활동상태,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전직을 그만둔 이유, 비구직 이유를 통해 육아·가사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

- 육아·가사에 대한 제한적 데이터 이용

- 어린 자녀의 유무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육아·가사와 출생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움
- 활동상태와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1998~2012년도 데이터 이용
- 전직을 그만둔 이유, 비구직 이유는 2005년도와 2012년도 데이터 이용

- 활동상태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 9개의 보기 중 택일

- 보기는 일함, 일시휴직, 구직,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 기타
- 2003년 이후 통학이 세분류되었으나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세분류를 이용하지 않음

-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36시간 미만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 8개의 보기 중 택일

- 보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본인이 원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 전직을 그만둔 이유는 전직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 11개의 보기 중 택일

- 보기는 개인·가족적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연로, 작업여건불만족,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혹은 사업경영악화, 기타

- 비구직 이유는 비경제활동여성을 대상으로 질문.
11개의 보기 중 택일

○ 보기는 전공·경력에 맞는 일이 없어서, 원하는 임금수준 혹은 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어서, 근처에 없어서, 교육·기술, 경험부족,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기타

□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주요 저해요소는 육아임. 육아시기는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동 중

- 활동상태가 육아인 여성의 비중은 3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정체를 보이는 반면, 3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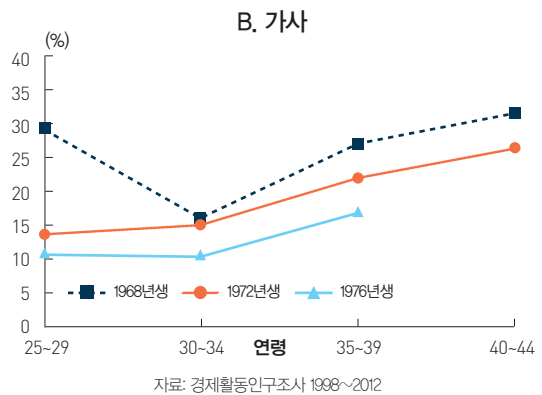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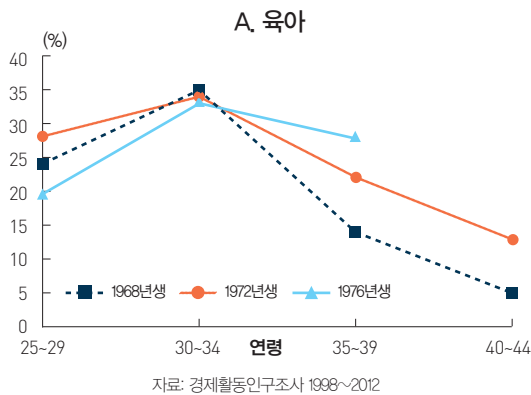
○ 육아활동 중인 30대 초반 여성의 비중은 정체. 1968년생, 1972년생, 1976년생 여성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이들의 약 35%는 육아활동 중

○ 반면 육아활동 중인 30대 후반 여성의 비중은 최근 태어난 여성일수록 증가. 1968년생 여성의 13%, 1972년생 여성의 21%, 1976년생 여성의 29%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육아활동 중

- 활동상태가 가사인 여성의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예를 들어 30대 후반이 된 1968년생, 1972년생, 1976년생 여성 가운데 각각 28%, 22%, 17%가 가사활동 중

[그림 5] 활동상태가 육아 혹은 가사인 여성의 비중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가 육아인 여성의 비중은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감소, 30대와 4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증가

○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1972년생과 1976년생 사이 9%p 증가. 1972년생 20%, 1976년생 29%

-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가 가사인 여성의 비중은 감소

○ 특히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 큰 감소를 보임. 1968년생 25%, 1972년생 17%, 1976년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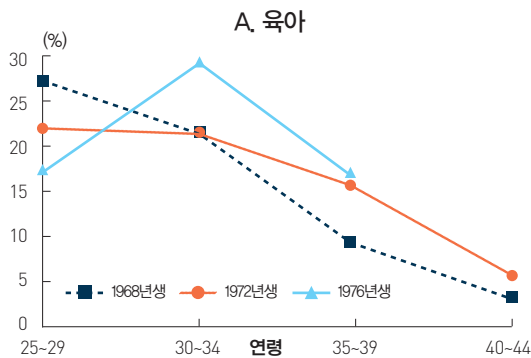
- 2005년과 2012년 사이 비구직 이유가 육아인 20대 후반 여성의 비중은 감소, 30대 후반 여성의 비중은 증가

○ 20대 후반 여성, 22% → 14%
○ 30대 후반 여성, 14%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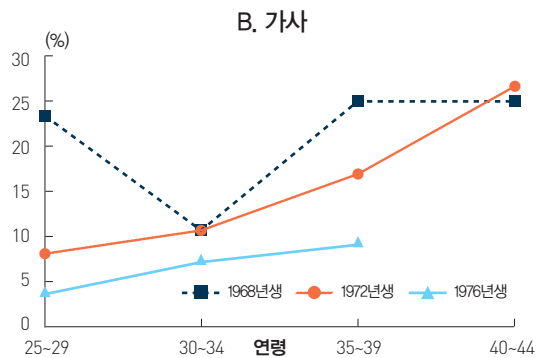
- 2005년과 2012년 사이 비구직 이유가 가사인 여성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음

○ 20대 후반 여성, 1% → 1%, 변화 없음
○ 30대 후반 여성, 12% → 15%

[그림 6]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가 육아 혹은 가사인 여성의 비중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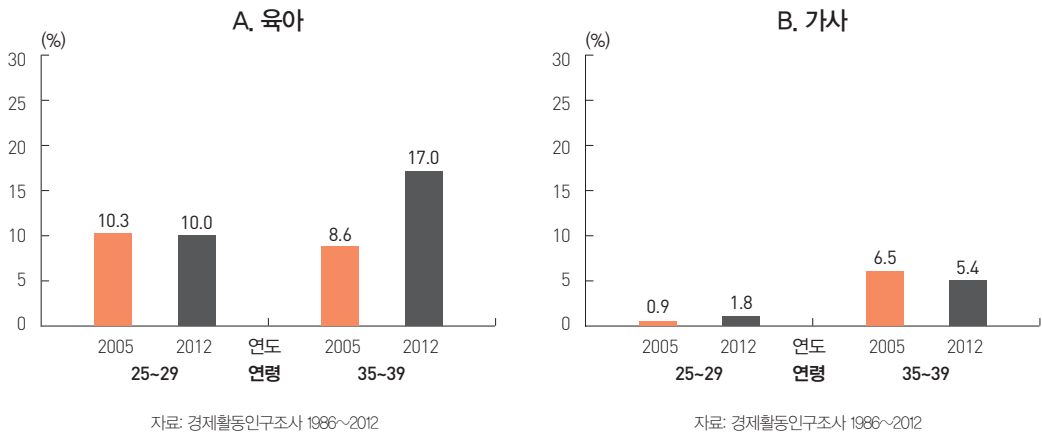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2012

[그림 7] 비구직 이유가 육아 혹은 가사인 여성의 비중



[그림 8] 전직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의 여성 중 그만둔 이유가 육아 혹은 가사인 여성의 비중



- 전직을 그만둔 이유가 육아인 여성의 비중은 2005년과 2012년 사이 30대 후반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

- 30대 후반 여성, 9% → 17%
- 20대 후반 여성, 10% → 10%. 변화 없음

- 전직을 그만둔 이유가 가사인 여성의 비중은 2005년과 2012년 사이 큰 변화 없음

- 30대 후반 여성, 6% → 5%
- 20대 후반 여성, 1% → 1%. 변화 없음

4. 결론 및 시사점

□ 여성경황을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부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육아 지원책에 편중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8개의 여성고용정책 중 4개의 법적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정책 모두 출산·육아와 관련

○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극복하고자 30대 여성에게 정책 초점이 맞추어짐

○ 4개의 법적 장치는 남녀고용평등, 적극적 고용개선,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 분쟁해결. 나머지 4개 정책은 임신·출산 여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고용촉진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이 중 고용촉진지원만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 그러나 출산·육아 지원책의 대부분이 여성 복지정책과 중첩되면서 주요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으로 국한

- 최근 15년 동안의 여성 경황을 정체 추이는 출산·육아 지원책만으로 여성 경황을 제고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증명

○ 특히,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은 고졸 이하 여성 경황을 의 정체 추이로 비추어볼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지원책이 여성 경황을 제고와 거의 무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여성 경황을 제고를 위한 출산·육아정책은 취업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정부는 15년의 정체기 동안 육아정책의 대상이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에서 30대 후반 여성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육아시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추어짐에 따라 예전에 비해 경력년수가 높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에 제약을 받게 됨

○ 이는 육아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기회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

○ 이들의 경제활동참여를 끌어내려면 30대 후반 여성에 중점을 둔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 필요

-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은 복지정책에서 취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책은 복지정책에 가깝음

○ 기존의 보육정책은 소득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취업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출산·육아기를 벗어난 1960년대생 여성들에게도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이들은 2012년 현재 40대 초반·50대 초반 여성으로 경황을 정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경황을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졸 이하·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50대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현 정부의 방침대로 30대 여성을 위한 육아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30대 여성 경황율의 증가로 전체 여성 경황율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연령대 여성의 경황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해야 함
- 경력·직종별 특화지원책을 통해 중년 여성이 재취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을 최소화해야 함

□ 경황율을 높이는 정책과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의 차이를 분명히 파악하고 실행해야 함

- 여성 경황율 증가는 여성 고용률 증가의 필요조건임
 -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들어온 여성이 고용되지 않으면 실업자로 남게 되어 경황율 증가가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률 제고이나 대부분의 여성 관련 정책방안은 경황율 제고를 위한 방안임. 노동의 수요 측면을 고려한 방안이 미흡함
 - 경황율 제고 정책은 노동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 고용률 제고 정책은 노동의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함
 - 여성 고용비용을 노동력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은 여성 취업자가 아닌 여성 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큼

〈참고문헌〉

- 권정현, 2008.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1980~2005", 한국노동경제논집, 31(2): 129~156.
- 배기준, 2013. "경제활동참가율의 분해: 인구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3(5): 72~84.